

광화문 정신

**정치
교체!**

젊은 대통령

구주와

광화문 정신! 젊은 대통령!

정치 교체! 구주와

반국가세력척결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문재인 정부 악법 폐지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국가안보

정치

정치

경제

관광

관광

국가안보

국가안전 확보

반국가세력척결

간첩, 중복세력, 주사파 등 반국가 행위자들을 철저히 차단하여 사회 불안 요인 제거

이행방법

주관 부처: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법무부
강화된 수사 체계 구축
국정원 주도 특별수사본부 설치: **간첩·중복세력 전담 조사팀 운영**
간첩죄-국가보안법 개정: **처벌 수위 상향(최소10년~종신형)**

반국가단체 해산: 관련 단체의 자산 몰수 및 재판 절차 간소화
공직자 보안 검증: **중복 성향 의심 인물 공직 배제**
신고 포상제 확대: **간첩 신고시 최대 5억 원 상금 지급**
지자체-국정원 연계: **지역별 반국가 활동 감시 네트워크 구축**

이행기간

1단계(2024~2025)

법률 개정 및 특별수사본부 가동

2단계 (2026~2027)

전국적 단속 및 교육·공직 청정화 완료

3단계 (2028)

통일 대비 안보 체계 최종 점검

재원조달방안

국가안보 예산 증액: 기존 국정원·검찰 예산의 20% 추가 편성

민간 기부금 유도

몰수 자금 활용: 반국가단체 자산을 수사·보상 재원으로 전용

안보 기금 설립: 국민 참여형 크라우드펀딩 운영

국가안전 확보

예산절감

국회 신뢰 회복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여 국민과의 형평성 강화, 특권 유지비용을 사회복지·국방 등 필수 분야로 재배정, 특권 남용으로 인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이행방법

주관 부처: 국회 사무처, 행정안전부 / **특권 전면 재검토**
특권 목록 공개: **현행 180개 특권을 분류**(면책특권, 의정활동비 등)
폐지 대상 선정: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 없는 특권 우선 폐지**
(고액 의정활동비, 무제한 교통편 지원)

법적 개정 추진 **국회법 개정:** 특권 근거 조항 삭제 또는 축소(면책 특권 범위 제한)
감사 시스템 강화: **국회의원 재산 공개 의무화 및 세비 사용 내역 실시간 공개**

이행기간(제21대 대통령 임기 내 2025~2030년)

1단계(2025~2026)

특권 목록 공개 및 국민 토론회 진행

2단계 (2027~2028)

국회법 개정 및 폐지 특권 단계적 시행

3단계 (2029~2030)

감사 시스템 정착 및 예산 재배정 완료

재원조달방안

재원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음

디지털 행정 확대: 서류 업무 간소화로 인건비 감축

연간 약 500억원(의정활동비·교통비 등 폐지로 절감) → 복지·국방 예산 전용

국회 운영 효율화

국민 부담 경감

정치 공정성 회복

문재인 정부 악법 폐지

문재인 정부 시절 제정된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악법을 폐지하여 국민 경제 활성화,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제정된 불공정 법률을 철폐하여 사회 정의 실현

이행방법

주관 부처: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악법 목록 확정

국민 신고 센터 운영: 악법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의 의견 수렴
전문가 TF 구성: 법학자, 경제학자, 시민단체로 악법 평가단 운영

법률개정 절차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악법 폐지 전담 기구 구성
국민 투표권 부여: 주요 법안 폐지 시 국민 투표 실시 (선택적)

대체 시스템

폐지되는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노동유연성 보장법)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완화하되, 소비자 보호 강화

이행기간(제21대 대통령 임기 내 2025~2030년)

1단계(2025~2026)

악법 목록 확정 및 국민 의견 수렴

2단계 (2027~2028)

국회에서 폐지 법안 처리 및 대체 법률 제정

3단계 (2029~2030)

법률 시행 후 모니터링 및 추가 조정

재원조달방안

재원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음

악법으로 인한 행정 비용 감소(연간 약 3,000억 원 예상) → 국민 생활 지원 예산으로 전환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임대

해외진출 기업 500개 사 본국 복귀 유치,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 조성(반도체, 2차전지, 의료기기 등) 일자리 30만 개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수도권-서해안 경제벨트 연계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이행방법

인프라 구축: 30Km² 내 스마트 산단·R&D 센터 건설 (2026~2030)

규제특례: 법인세 100% 감면 (20년), 외투기업 부지 무상공급

물류 지원: 평택항·인천항 연계 물류 허브 구축 (2028~2032)

이행기간(제21대 대통령 임기 내 2025~2030년)

1단계(2026~2028)

기반시설 조성 및 첫 기업 유치

2단계 (2029~2032)

산업단지 완공 및 본격 운영

3단계 (2033~2035)

경제효과 확산 및 추가 투자 유도

재원조달방안

국비 10조 원: 산업부·지자체 예산 편성

예산 절감: 기존 산단 리모델링으로 비용 최적화

지방비 5조 원: 경기도·안산시 공동출자

민간 15조 원: 기업 투자유치 (세제 혜택 제공)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아시아 최고 수준의 복합 리조트 도시 조성, 연간 관광객 2,000만명 유치 및 일자리 10만개 창출, MICE(회의·인센티브·컨벤션·전시) 산업 육성으로 경제 효과 50조 원 달성

이행방법

인프라 구축: 5성급 카지노 호텔 10개 건립(2026~2030), 컨벤션 센터, 쇼핑몰, 엔터테인먼트 시설 클러스터화
규제 완화: 카지노 운영 면허 확대(글로벌 기업 유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법인세 50% 감면)
문화·관광 연계: K팝·영화 페스티벌 정기 개최, 제주 전통문화 체험관과 연계한 관광 패키지 개발

이행기간

1단계 (2026~2028)

시범 사업 구역 지정 및 첫 호텔 건설

2단계 (2029~2032)

주요 시설 완공 및 마케팅 본격화

3단계 (2033~2035)

경제 효과 확산 및 추가 투자 유치

재원조달방안

국비 5조: 문화체육관광부·제주도 예산 지원

수익 재투자: 카지노 세수 일부를 제주 관광 인프라 개선에 활용

지방비 3조: 제주도가 인프라 구축 비용 일부 부담

민간 20조: 글로벌 카지노 기업 및 리조트 업체 투자 유치

국가 안전 확보

한미일 안보협력 심화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북한 전역 실시간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군사시설·미사일 이동 등 위협요소 조기경보 능력 향상
한미일 정보공유 체계 강화로 안보협력 심화, 우주감시 기술 자립화 및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

이행방법

위성체 개발: 고해상도(30cm급) 광학·적외선·SAR(합성개구레이더) 위성 10기 개발, 한국형 위성플랫폼(KARI) 활용, 국산화율 90% 이상 달성

발사체 확보: 누리호 3·4호기 등 한국형 발사체 활용, 2기씩 묶음발사로 2028년까지 전량 배치
지상국 구축: 서울·대전·제주에 신규 지상관제소 설치, AI 기반 자동분석시스템 도입

이행기간(제21대 대통령 임기 내 2025~2030년)

1단계 (2025~2026)

시제기 2기 개발 및 시험발사

2단계 (2027~2028)

본격 양산(연 3기) 및 궤도배치

3단계 (2029~2030)

체계 최적화 및 운영개시

재원조달방안

국방비 특별회계 15조원 편성(연 1.5조원)

민간투자 5조원(우주산업 협력기업 참여)

예산재배정 기존 감시예산(약 3조원) 전용

한미공동펀드 2조원 조성(정보공유 대가)

국가안전 확보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북한 핵심 표적 타격 및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임무 전담, 대북 첩보·침투 작전 강화로 안보 사각지대 해소, 특수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방 역량 강화, 한미 연합 작전 체계 고도화

이행방법

부대 재편성: 육군 특전사내 "실미도 부대" 독립 편성 (정원 1,500명), 북한 내 핵시설·미사일 기지 정밀 타격 훈련 강화
장비 현대화: 스텔스 드론, 정밀유도무기, AI 전술시스템 도입, 해상 침투용 초정밀 잠수정 개발 (국산화 90% 목표)
훈련 체계: 미국 델타포스·네이버실과 공동 훈련 프로그램 운영, 연 4회 실전 모의 작전 시행 (백령도·DMZ 일대)

이행기간(제21대 대통령 임기내 2025~2030년)

1단계 (2025~2026)

부대 창설 및 인원 선발

2단계 (2027~2028)

장비 도입·훈련 체계 완성

3단계 (2029~2030)

한미 연합 작전 본격화

재원조달방안

국방비 특별회계 7조 원 (연 1.4조 원)

민간기술 활용 방산업체와의 R&D 협력 (1조 원)

건설, 교통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30분 주파로 수도권-부산권 메가시티 통합 실현, 지상 교통 체증 해소 및 대기오염 40% 감축
첨단 철도 기술 국산화로 수출 산업 육성, 연간 100조 원 경제효과 창출

이행방법

노선 설계: 지하 100% 구간 (서울~대전~대구~부산), 자기부상+초전도 하이브리드 기술 적용
기술 개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도 1100km/h 차량 개발, AI 운행 시스템 도입 (무인주행 가능)
환경 대책: 지반 침하 방지 공법 적용, 소음·진동 1/10 수준 저감

이행기간

1단계 (2025~2028)

서울~대전 구간 시범 운영

2단계 (2029~2032)

대전~부산 구간 확장

3단계 (2033~2035)

전 구간 개통 및 최적화

재원조달방안

국비 20조 원: 교통부 예산 + 기후대응 기금

민간 25조 원: 삼성·현대 등 컨소시엄 투자

지자체 5조 원: 서울·부산 등 6개 광역시 분담

해외 차관 10조 원: 일본·독일 기술협력 대가

한일 해저터널

한국일본 경제 공동체 건설, 부산~후쿠오카 200km 직결로 한일 1시간 생활권 구현, 연간 1천조 원 경제 효과 및 500만 개 일자리 창출, 동북아 교류 허브로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 강화

이행방법

공학 기술: 3중 안전터널 설계 (지진·화재·침수 대비), 자기부상열차 연계 (시속 500km 주행)
국제 협력: 한일 공동 건설 컨소시엄 구성, 일본의 세이칸 터널 기술 지원 반영
환경 보호: 해양생물 서식지 보존을 위한 인공어초 설치, 친환경 건설자재 90% 이상 사용

이행기간

1단계 (2026~2030)
부산~쓰시마 구간 시공

2단계 (2031~2035)
쓰시마~후쿠오카 구간 연결

3단계 (2036~2040)
전 구간 개통 및 테스트

재원조달방안

일본정부에서 200조원 조달, 한국정부는 0원

터널 통행료 수익 재투자 (연 2조 원 예상)

보건, 의료

개인별 전담의사지정

국민 1인 1주치의 시스템 구축으로 예방의료 강화, 만성질환 관리 효율화로 의료비 지출 20% 절감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의료접근성 균등 보장, 의료-보험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건강관리 최적화

이행방법

의사 지정 시스템: 지역별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전담의 배정, 연령·질환별 전문의 매칭 (AI 추천 시스템 적용)
플랫폼 구축: 국민건강앱 개발 (진료기록·처방·상담 통합관리), 24시간 원격의료 시스템 연계

이행기간(제21대 대통령 임기 내 2025~2030년)

1단계 (2025~2026)
10개 시범지역 운영 (서울·부산 등)

2단계 (2027~2029)
전국 1차 의료기관 확대 적용

3단계 (2030~)
AI 맞춤형 관리 시스템 고도화

재원조달방안

건강보험 재정 5조 원 (연 1조 원 편성)

예산 재배정 기존 질병관리에산 3조 원 전용

민간협력 2조 원 (의료플랫폼 기업 투자 유치)

장기효과 만성질환 감소로 절감된 의료비 재투자